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관련 기사 12면

대선 이후,
미국은 어디로?

5, 6~7면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차별받는 사람들을
대변할까?

5면

잇단 영아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2면

여권의 위기와
야당들

3면

왜 자본주의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좋아할까?

8~9면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12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10면

KBS 청소·시설관리 비정규직 11면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전주현

최근 안타까운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달아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10~20대 미혼모가 출산 직후 화장실, 쓰레기통, 골목길, 야산에 자신의 아기를 버리는 비극이 반복됐다.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영아 살해가 110건, 영아 유기가 1272건 발생했다. 최근 3년(2017~2019) 간 영아 유기가 이전 몇 해보다 더 늘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생명 경시” 운운하며 “비정한 모정”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린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법무부는 양형 기준을 높이고 자 영아 살해 사건에 일반 살해죄를 적용하는 형법 개정을 예고했다. 얼마 전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영아 유기·살해 범죄가 계속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영아 유기·살해죄의 형량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처벌 강화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다.

벼랑 끝

영아 유기는 미혼모에 대한 천대와 가난이 초래한 비극이다.

미혼모 천대는 자본주의 가족제도



비극을 멈추려면 처벌 강화가 아니라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 2011년 103주년 세계 여성의 날 집회

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수혜자들(자본주의 국가와 자본가들)은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개별 가족, 특히 여성에게 떠넘기며 막대한 이득을 얻는다. 그래서 가족제도를 뒷받

침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사회 곳곳에 유포한다.

그리하여 낙태와 혼외 출산은 터부시된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하면 ‘문란하고 헤프다’는 비난을 받는다.

대체로 10~20대 미혼모의 영아 유기는 원치 않는 임신을 미처 중단시키지 못해 벌어진다.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는 도덕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낙태할 기회를 놓치는 여성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은 이러한 압박에 각별히 취약하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과 학교에서 외면당하며 고립돼 낙태 기회를 놓치기 쉽다.

하지만 ‘성평등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기만적인 낙태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놔다. 현재보다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제한하려 한다. 저출산 심화로 미래 노동력인구와 징병자 수가 급감해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낙태권은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을 통제하는 데 꼭 필요한 권리이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낙태권이 보장된다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시킬 수 있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노동계급·서민층의 미혼모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출산과 양육으로 학업과 경력이 단절되고, 혼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차별과 멸시 때문에 미혼모는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다. 불안정하고 열악한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

미혼모의 월평균 소득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약 92만 원이다(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 ‘아이를 낳으면 가난이 덮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미혼모의 당당한 육아를 응원한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은 내놓지 않았다.

현재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은 전국에 62개(수용인원 약 1000명)인데, 이중 출산 지원시설은 고작 22개(수용인원 약 556명)에 불과하다. 입소 기준도 무진장 까다롭다. 신청 당시 비경제적 활동 상태에 있어야 하고 부양자가 없어야 한다. 부동산이 있어도 입소가 제약된다.

한부모 가정은 고작 월 최대 20만 원(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꺾쇠지출한 양육비라도 받으려면 월 소득이 중위소득 52퍼센트(2019년 2인 가정 기준 약 151만 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속 가난해야 하는 것이다.

차별과 빈곤에 시달리는 미혼모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영아 유기와 같은 비극을 멈추고 위기로 내몰리는 미혼모의 삶을 개선하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양육 지원 등의 복지를 크게 늘려야 한다. 또한 출산 여부를 여성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낙태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정의당의 낙태죄 폐지·낙태권 보장 법안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이은주 의원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 개정안을 정의당의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 보장을 바라는 다수 여성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에 지지를 보낸다.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가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임신중단을 음성화하여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낙태한 여성

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폐지하고, 처벌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했다.

이은주 의원안은 낙태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임신의 유지 또는 중단에 관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임산부에게 특정한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출산 여부를 다른 누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이은주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이름도 ‘임신·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 보장 및 지원법’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관련 정보 제공 등 낙태 지원에 대한

내용도 제시했다. 여성에게 관한 죄책감을 심어주고 낙태의 문턱을 높이는 상담의무 따위는 두지 않았다.

낙태시 여성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여성 노동자들은 낙태 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일터에 나가야만 했다.

이번 이은주 의원안은 지난해 현재 판결 직후 나온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의 안(14주 이내 완전 허용, 14주~22주 부분 허용)이나 그 전까지의 정의당의 입장(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에 견줘도 더 나아간 것이다. 정의당이 여성들의 염원에 호응하여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훨씬 더 충실한 안을 낸 것은 좋은 일이다.

앞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도 정의당의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이은주 의원안이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낙태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 물론 이은주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이 처한 조건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의료적 필요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한 규정은 낙태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국가의 책임으로 분명하게 못박지 않은 것이어서 유명무실할 수 있다. 낙태가 모든 여성의 실질적인 권리가 되려면, 비용 부담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재정 지원(무상 낙태 시술)이 필요하다. 이 점은 노동계급과 서민층 여성, 청소년, 이주·난민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곧 낙태죄를 유지한 정부의 입법에 고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정부안은 철회돼야 한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성취할 때까지 아래로부터 투쟁이 지속·확대돼야 한다.

이현주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청와대-검찰 갈등 격화 이후

윤석열의 인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김문성

쿠키뉴스(〈국민일보〉 자회사)가 의뢰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1위를 차지했다. 상당 기간 1위를 지켜 왔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최근 2위로 치고 올라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각각 2, 3위로 밀려났다.

윤석열은 보수층, 중도층, 무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62퍼센트가 윤석열을 지지했다. 한편, 무당층에서는 지지 후보가 없다는 답변이 29.4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이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윤석열의 인기는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면서 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문재인인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낙연 대세론의 거품도 견혔다.

11월 6일에는 “친문 적자”라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에 참석해 인터넷 뉴스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가 사실로 거듭 판정된 것이다. 그런 조작 때문에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는 큰 흠집이 났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측근이나 실세들이 권력형 부패 혐의를 받는 일이 점점 늘고 있어 문재인과 민주당의 이름도 깊어질 듯하다.

윤석열의 인기 상승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듯하다. 이지사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를 감수하고 상대적으로 서민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아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이 오르자 이 지사는 주류 세력과 친문진영에 잘 보이려고 했다. 삼성 이견회를 한껏 좋게 말해 준 것이나, 아파트 분양가 억제에 반대한 것도 그의 지지층 또는 문재인에게 실망해 무당층으로 돌아선 이들에게 실망을 줬을 것이다.



차기 대선 후보 1위? 문재인 정부의 위기에도 좌우 모두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다 좌천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문재인과 틀어진 것도 현 집권 세력의 비리를 수사하려 해서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에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윤석열에게 기대를 걸게 된 듯하다. 주류 양당의 부패와 거리를 둔 행보가 끌어낸 일종의 포퓰리즘적 기대인 것이다. 그래서 그가 ‘원조 부패’ 정당(국민의힘)에 영입되면 그의 인기는 한때의 거품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가 주류 양당 모두를 비판하며 독자적인 반(反)부패 포퓰리즘적 정치 행보를 한다면,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 자극하는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지지 회복 노리는 우파 야당의 변장술

윤석열의 인기 상승은 국민의힘의 약점도 보여 준다. 총선 전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 이전 상태로 재통합하는 데 도달했지만, 분열된 보수층을 모아낼 새 리더십 창출에는 곤란을 겪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순위에도 못 들었다. 같은 기간에 (윤석열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다 합쳐서 7퍼센트였다. 국민의당 안철수와 무소속 홍준표까지 더해도 16퍼센트다. 이 조사에서 이낙연과 이재명이 각각 23, 22퍼센트로 1, 2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 꺼안기 방침을 내세워 강성우파 실체를 온건한 이미지로 가리려고 한다. 그러나 우파적 정책들을 시행해 반감을 샀고 결국 부패 문제로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 박근혜)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그 정치적·사회적 기반은 그대로다. 국민의힘의 변신은 위장일 뿐이다. 이명박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와 차별화하면서 경제 살리기와 “중도 실용”을 내세웠지만, 집권 후에 펼친 정책은 매우 우파적이었다.

체제의 수혜자들인 지배계급에게는 문재인 정부를 용도 폐기하고 우파 야당에게 베풀할 동기가 아직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투쟁을 이력저

력 억제하면서 경제 회복에 필요한 상대적 정치 안정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파의 회복은 문재인인의 위기가 더 심화돼 정치 양극화가 가속될 때 본격화될 수 있다. 한편, 태극기 우익의 지도자 중 하나인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는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운동을 흉내내어 신당 창당을 시도하고 있다. 우파 정당의 중도 제스처 일판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좌파의 정치적 주변화

문재인인의 개혁 배신과 부패, 위선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윤석열에게로 모인 것은 진보 정당들의 존재감 약화를 더 크게 보여 준다. 진보정당 후보는 겨우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만 거론되는데, 여러 조사에서 존재감이 없다. 지난 대선에서 최초로 200만 표를 넘긴 일이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진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노동개약 등을 비롯한 제반 정책들을 놓고 전보다는 비판을 늘

렸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 체제에 대한 언론의 우호적 보도가 최근 늘어난 것은 오히려 정의당이 사회연대전략을 강조하는 등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노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진보 정당들의 존재감이 약화된 근본적 원인은 최근 노동자 투쟁이 주목할 만한 수위를 기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스타 항공 사태 등에서 보듯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투쟁이 승리하려면 좌파적이고 급진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계의 대표적 3조직(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지도부들은 국유화 요구를 삼가는 등으로 그런 종류의 정치(문재인과의 단절을 수반할)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개혁주의 중도좌파 지도자들의 잘못된 노선과 영향력에 도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급진좌파도 답보 상태이다. 그들도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우파를 이롭게 할 듯한 점예한 정점에서는 말을 아껴 왔다. 그들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한·일 갈등, 권력형 부패 의혹, 그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불거진 청와대-검찰 갈등 등에서 문재인 정부를 급진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보기 어려웠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 변혁이 문제”라는 식으로 비껴가는 것은 회피나 도망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반이 커지면서 무당층이 늘고 있다. 이 층은 아직 좌든 우든 특정한 경향으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의 수사 정치가 포퓰리즘적 인기를 끄는 것은 이런 상태를 반영하는 듯하다. 그러나 더 심각해질 것 같은 경제 침체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정치 위기가 깊어지면 정치 양극화 압력도 커질 것이다. 우파가 그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 노동자 운동과 진보 정당들은 문재인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으로 막대한 이윤 얻으려는 제약기업들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 [화이자] 백신 실험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은 끝이 보일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보리스 존슨은 “저는 언덕 너머 멀리서 과학이라는 기병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나팔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약간 거리가 있지만 말입니다.”

[방역을 위한] 봉쇄를 끝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종 백신을 확실한 해결책인 것처럼 선전하곤 한다.

그러나 백신 개발 과정은 처음부터 민간 기업들과 경쟁하는 국가들의 필요에 좌우돼 왔다.

새로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

장하는] 모든 자료는 제조업체인 거대 제약기업 화이자 자신이 제공한 것들이다. 어떤 독립적인 연구자나 기관도 화이자의 데이터를 검증하거나 제품이 수 주 안에 출시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없었다.

백신이 실제로 효과가 있고 빠르게 배포되더라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고통받거나 죽을 위험에 놓일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열쇠를 민간 기업이 쥐 수 있게 한다는 발상은 부도덕하다. 백신 개발자들은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생산을 늘려 오로지 필요에 따라 배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두 차례 접종해

야 하는 백신에 각각 14.7파운드 [약 2만 1700원]의 가격을 매겼다.

이로써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백신이 발표된 뒤 화이자의 주가는 7.6퍼센트 올랐다.

효과

이 기업들은 모든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영업비밀로 독점하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약물 개발이 사람들을 낮게 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거대 제약기업의 사장들은 수익성을 쫓는다. 제품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

할 잠재력이 아니라 이윤 창출 능력에 따라 개발·생산·유통·평가된다.

화이자는 새로운 백신의 효과가 90퍼센트를 넘는다고 주장한다. 올해에는 5000만 개, 내년에는 1억 30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유한 정부들이 엄청난 주문량을 독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1억 회 분량을 구입했고, 영국 보수당 정부는 5000만 회 분량을 확보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확실히 몇 달 동안, 어쩌면 영영 백신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자선단체인 옥스팜의 말대로 백신은 “구하거나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

게는 효과가 0퍼센트일 것이다.”

HIV/에이즈의 치료법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HIV감염인 중 1400만 명이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화이자의 백신은 접종하는 날 전까지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지금의 세계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가난한 나라들은 운송과 보관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모든 단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배양해 왔다.

생명을 구할 과학적 발전은 거대 기업의 수중에서 빼앗아와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3호 / 번역 장호중

공공기관 직무급제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임금 억제책

이정원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직무급제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직무급제 추진'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최근 이를 더 구체화하고 평가 비중도 높이도록 수정했다.

수정된 경영평가 편람에는 직무급제 도입에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꼽히는 직무 분석, 직무가치 평가 여부 등 세부 내용을 평가의 척도로 제시했다. 기본급에 직무급제가 반영됐는지, 직무급의 운영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보수 규정을 개정했는지 등 추진 상황을 꼼꼼히 따져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내년 3월 하순까지 2020년 경영평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직무급제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의 실적 평가와 기관의 예산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관철의 핵심 수단이 돼 왔다.

그동안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 신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기존의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임금 차별 정당화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구해 왔는데, 이는 온갖 규제 완화와 같은 친기업 정책과 임금·노동시간 유연화와 같은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정책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된 터라 그 필요성은 더 커졌다. 국회에서 노동개악 추진을 서두르고 공공기관에서 직무급제 확대를 압박하고 나선 이유이다.

정부는 직무급제 추진에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라는 진보적 색칠을 해 가며 정당화하지만, 실제 의도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무에 따른 임금 차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각 직무에 등급을 매겨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낮은 임금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평생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인 직무급제가 대거 도입됐다.

정규직도 근속이 길다고 자동으로 임금·승급이 오르는 게 아니라, 맡은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노동자가 자신의 직무 등급을 높여 직무 가치가 높은 일을 맡지 못한다면 임금을 올려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의 차이, 가치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평가 기준은 사용자들이 좌우하고, 기존에 형성된 임금 차별(고



임금 체계 개악 자체가 문제다 한편에서 대화 테이블 만들고서 다른 한편에서 개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7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



6월 12일 공무직위원회 2차 회의장 앞에서 팻말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

용형태, 성별, 인종 등)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직무급제가 공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직무급제 도입이 노리는 것은 임금 차별 정당화와 임금 인상 억제다.

경사노위 합의 추진

정부는 공공기관들에 직무급제 도입을 압박하는 것과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도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그동안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 온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11월 21일 운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최근 합의문 도출을 위한 막판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비공개로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에도 번번이 그래 왔듯, 한 편에서는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노조 지도자들을 앉혀 놓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진 시한을 정해 놓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무기로 직무급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 대화는 그것이 내세우는 대의명분과 달리,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장이다. 합의를 성

사시키면 임금체계 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직무급제에 의구심과 불신이 적잖은 노동자들의 수용도를 높이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화 테이블에 노조 지도자들을 끌어들이는다.

그 점에서 그동안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 지도자들이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온 것은 문제이다.

이 노조 지도자들은 직무급제 추진 과정과 내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견해 차이가 있으나, 직무급제 도입 자체를 원천 반대하지 않는다. 생애임금 불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조 참여 보장, 성과주의 보상체계 확대 배제 등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제 조건들은 직무급제 도입에 따르는 문제점을 막아 주는 안전판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노조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해 온 정부의 일방 추진 반대가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봐도, 정부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이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정부가 직무급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해도 개악을 전제하

수세적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노조가 직무 분석을 비롯한 직무급제 설계에 관여할 수 있다 해도, 주도권 자체는 사용자에게 있어 노조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직무 평가 결과를 놓고 노동자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될 것이 뻔하고, 이는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을 키우기 십상이다.

단호한 반대 필요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위원회 논의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추상적 수준 이더라도 경사노위에서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음을 경계하며 비판을 강화해야 한다. 노사정 합의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게 맞을 것이다.

노동운동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 비판에만 초점을 두거나 직무급제의 일부 내용에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의도를 폭로하면서 임금체계 개악 그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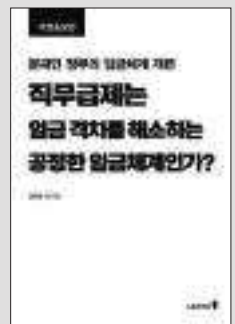
요즘 노동운동 안에서는 '개악 저지'를 주장하는 것은 수세적 태도라는 말도 흔히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당면한 개악을 막아내야 개선을 도모할 동력이 나오기 마련이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은 직무급제를 보완할 대안으로 몇몇 방안들도 내놓았다. 예컨대, 직무급제를 도입하되 정규직의 초임 임금 수준을 높이고 말년 임금 수준은 낮추자고 하거나, 공공기관 중 고임금 기관들의 인상률을 낮추고 저임금 부분을 더 올리자는 식의 제안이 나온다.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피해를 줄이거나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전반적인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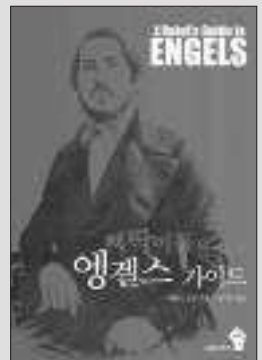
들의 임금 억제를 위한 것인 만큼, 이런 방안들은 시행이 되기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저임금층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정규직·장기근속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끌어내리는 데만 이용되기 십상일 것이다.

추천 소책자



개정정보판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김하영 외 지음
노동자연대, 50쪽, 2,000원

새로 나온 소책자



**삐딱이들을 위한
엔겔스 가이드**
커밀라 로일 지음, 이수현 옮김
노동자연대, 104쪽, 4,000원

신간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차별받는 사람들을 대변할까?

미국 부통령 당선자 카멀라 해리스는 새 정부에서 어떤 구실을 할 것인가?

해리스가 미국 최초의 여성·유색인종 부통령이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다. 해리스가 차별에 단호하게 맞서리라는 기대가 많다.

그러나 바이든이 해리스를 이용해 민주당 내 좌파를 단속하고 근본적 변화 요구를 억누르고자 한다는 조짐이 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2020년 미국 정치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새로 들어설 정부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운동은 국가의 인종차별을, 특히 경찰이 거의 매주 흑인을 살해하는 현실을 규탄해 왔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덕에, “경찰 해체”, “교도소 폐지” 같은 구호가 수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킬 대중적인 요구가 됐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한 소수의 좌파적 민주당 하원의원들(“스퀴드[분대]”라 불린다)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바라는 바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왼쪽에서 제기되는 이런 위협을 지적하며, 영국의 주간지 〈옵서버〉는 11월 7일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퀴드와 달리 상식이 통하는



카멀라 해리스의 지난 이력은 좋게 봐도 줄타기 이상 되지 못한다

부통령 당선인인 카멀라 해리스가 그들을 단속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유죄

특히 흑인들에 영향을 끼치는 쟁점들에서 해리스의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이력은 잘 봐 줘야 모순적이다.

예컨대, 해리스가 유죄 선고를 받은 일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보다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선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리스는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죄로 밝혀져도 계속

감옥에 가둬 두려 애쓰기도 했다. 해리스는 경찰 살해로 유죄 선고가 내려진 한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하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경찰이 인종차별적 편견 교정 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몇몇 경찰의 [유색인종] 총격 사건을 수사하라는 요구는 거부했다.

이런 교묘한 줄타기는 민주당이 받는 양편의 압력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에서 민주당은 “범죄 엄단”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보여야 하고 우파의 환심을 사야 한다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는다. 그 반대편에는 민주당에 투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언론에 수시로 폭로되는 경찰의 인종차별에 진저리를 친다.

그러나 이제 집권한 만큼 바이든과 해리스는 강력한 국가를 유지하고 좌파에 재갈을 물리는 방향으로 뚜렷이 기울게 될 것이다.

찰리 김버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730호 / 번역 김준호

왜 미국에는 노동자 대중정당이 없을까?

다른 여러 나라와는 달리 미국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투쟁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영국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노동계급과 연결된 개혁주의 정당인 노동당이 있다. 하지만 왜 미국에는 이에 견줄 만한 정당이 없는 것일까?

미국에서는 매우 전투적인 노동계급 행동이 있따라 있었고, 사회주의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도 거듭 있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80년대에 쓴 글에서 미국에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 이유로 두 가지를 주되게 내세웠다.

엥겔스는 새로운 정착민들이 원주민들을 잔혹하게 몰아낸 뒤 거대한 면적의 토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덕분에 노동계급이 정착해서 성장하는 것이 억제됐다고 말했다.

1865년에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후 커다란 산업 호황이 있었다. 그러나 엥겔스는 노동계급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노동자들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했고, 그들의 일자리는 새로운 이민

자들이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 분석이 맞든 틀리든 간에 1920년대가 되면 이 분석은 더는 적용될 수 없었다. 주요 도시에 정착 노동계급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노동계급의 전투성이 엄청나게 고조됐음에도, 노동자 정당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이는 좌파가 민주당 내에서 조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은 1930년대 이전까지는 노예제를 지지하고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인종차별적인 ‘짐 크로 법’ 지지 정당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1930년대에 민주당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 이당의 이미지가 크게 바뀌었다.

1930년대에는 대불황의 고난과 시련에 맞서 수백만 노동자들의 전투적 행동이 몰아쳤다.

그 결과 루스벨트는 미국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뉴딜”이라고 알려진 정책을 도입해야만 했다.

이 시기에, 노조가 독립적 정당을 만

들어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영향력 있던 조직인 산별노조협의회(CIO)의 지도부는 이런 논의에 관심이 없었고, 대신에 루스벨트와 민주당과 제휴하는 것을 택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상당한 지지 속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 기회는 유실됐다.

유실

이때부터 좌파와 노조는 민주당 내에서 조직해야 하며 자신들만의 정당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뿌리를 내렸다.

민주당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중에는 1960년대 반동적인 남부의 딕 시크랫[인종 분리를 지지한 미국 남부의 우파적인 민주당원들을 당 밖으로 몰아내려 한 재편 시도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지배계급의 지지를 받는 자본가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었다. 이는 지금도 마

찬가지다.

일부 좌파는 수십 년간 거둬들인 민주당에 노력을 쏟아부었다. 그 정성이면 독립적 정당을 구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버니 샌더스 같은 인물들의 진보적인 정치가 미국에서도 청중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

샌더스나 또 다른 좌파 지도자가 노동조합 운동의 요구 일부를 받아들일 정당을 만든다면, 이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하나 더 생기더라도 —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세계 곳곳에 대중적으로 존재한다 — 그 당은 이 시대의 복합적 위기들과 대결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류의 선거 대응 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전진시키는 혁명적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훨씬 낫다.

소피 스콰이어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730호 / 번역 김동욱

미국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트럼프 패배를 디딤돌 삼아

미국 ‘마르크스21’ 회원인 버지니아 로디노가 대선 후 미국 좌파들의 과제를 설명한다. 버지니아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조 바이든의 선거 승리는 미국 자유주의자들과 진보 단체들을 고무하는 효과를 냈다.

11월 3일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 바이든의 선거 승리에 기뻐서이기도 했지만, 개표가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에 의해 중단되지 않고] 온전히 완료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하지만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가 보내는 경고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버락 오바마가 집권했을 때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이 사그라든 바 있다.

최근에도 오바마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연대하는 NBA 선수들을 압박해 파업을 중단시켰다.

기업의 후원을 받는 대통령이 진보적 변화를 위한 투쟁에서 핵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좌파가 떨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이든이 새 정부에 들일 것이라 알려진 인물들을 보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이든은 공화당 인사 여럿을 새 정부에 들일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바이든은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골랐다.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州) 법무장관 시절 강경한 ‘법질서 확립’ 정책을 펼쳤다.

바이든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찰을 개혁하리라 기대해서도 안 된다.

경찰 예산 증액

바이든은 경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운동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관련 기사 본지 315호 ‘미국 민주당은 어떻게 진보 염원을 좌절시켜 왔는가’). 또 민주당이 항상 당내 좌파들에 적대적일 것임도 분명하다.

민주당 실세들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로 대표되는 좌파적 여성 하원의원들] “스퀴드[분대]”의 재선을 승리라고 여기지 않는다.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현실 유지이기 때문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설 유일한 수단인 공동전선을 계속 건설해야 한다.

결국 트럼프·바이든 중 누가 당선됐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똑같다.

선출된 대표에게 기댈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주민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고 “이주민 강제 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11월 14일 하루 행동의 날이 조직되고 있다.

이런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 우리가 투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정치인들은 어떤 개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730호 / 번역 김준호

대선 이후, 미국은 어디로?

김준호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1월 9일 주최한 공개 온라인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약간 증보한 것이다.

11월 7일, 개표 나올 만에 민주당 조 바이든이 당선에 충분한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나가겠다고

만 말이다.

지난 4년 동안 온갖 패약을 저지르고 극우·파시즘을 고무해 온 트럼프가 패했다는 소식은 환영할 일이다. 트럼프 당선 첫날부터 이제까지 다양한 저항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이번 결과는 각별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될 것이라 예상한 사람들은 적었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이

대승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독식해, 트럼프와 공화당이 대패하리라는 예측이 주류 논평가들 사이에 팽배했다.

현실은 달랐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초집전을 벌였고, 민주당은 하원에서 의석을 상당히 잃고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 획득에 실패했다. 반면 트럼프는 지난 선거보다 득표를 800만 표 가까이 늘리며 상당한 결집을 과시했다.

바이든과 민주당의 승리?

미국인 약 1억 5000만 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약 62퍼센트로, 1900년 이래 미국 선거에서 가장 높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심판 여부를 두고 양극화가 첨예한 가운데 상당한 결집이 이뤄졌음을 보여 준다.

트럼프 집권 4년 내내 미국 사회가 겪는 위기가 첨예했고 그에 맞선 저항이 벌어지며 반(反)트럼프 정서가 강력하게 형성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2020년만 봐도, 코로나19로 24만 명 넘게 사망했고, 수천만 명이 일자리와 집을 잃었으며, 노동계급과 유색인종은 잔혹한 위협으로 내몰렸다. 이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며 거대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나라를 뒤흔들기도 했다. 수많은 노동계급·청년들 사이에 반(反)트럼프 정서가 커졌다.

필라델피아·미니애폴리스·디트로이트·애틀랜타 등 경합주 대도시들뿐 아니라 휴스턴·오스틴 등 심지어 공화당 강세 지역의 대도시에서도 반(反)트럼프 표가 상당히 나왔다. 바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강력하게 벌어진 도시들이다.

이런 정서 덕에 바이든은 역대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많은 약 7500만 표를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저지하려면 마뜩찮더라도 바이든에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겼던 듯하다.

하지만 트럼프도 7000만 표 넘게 득표해, 역대 2위 득표를 했다. 이는 지난 선거보다 800만 표 가까이 는 것이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의 2008년 대선 득표보다 많은 것이다.

쓰라림

트럼프는 신자유주의가 낳은 결과에 대한 서민의 쓰라림과 두려움에 기댔다.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낳고, 심지어 그 위기에서 득을 보는 대기업과 이들을 비호하는 주류 정치인들을 향한 커다란 분노가 미국 노동자·서민들 사이에 고여 있다.

트럼프는 온갖 반동적 사상을 동원해서 반(反)주류(아웃사이더)의 대변자 구실을 자처했다. 트럼프가 가한 자극이 너무 거센 나머지, 기존 지배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지배계급 주류는 트럼프한테 등을 돌렸다. 반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국수주의·외국인 배척 등이 자신들을 지켜 주리라 여긴 보수적 백인 중간계급과 소도시 유지들은 적잖이 트럼프에 결집했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는 일부 백인 노동자들과 심지어 유색인종에게서도 득표할 수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트럼프가 그런 층에서 많이 득표하는 것이 필연은 아니었다.

예컨대 플로리다에서 트럼프는 51퍼센트를, 바이든은 48퍼센트를 득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치러진 최저시급 기준 인상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는 61퍼센트가 인상 찬성에 투표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그중 20퍼센트인 100만여 명이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에 투표한 것이다.

이를 보면, 바이든이 트럼프를 압도할 득표에 실패한 것은, 적잖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바이든을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바이든은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보다 1000만 표를 더 얻었는데도, 불황의 피해를 크게 입은 쇠락한 공업 지대 ‘러스트 벨트’에서 득표를 거의 늘리지 못했다.

미국 마르크스주의자 마이크 데이비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던 몇몇 선거구에서 바이든은 2016년 클린턴보다도 적게 득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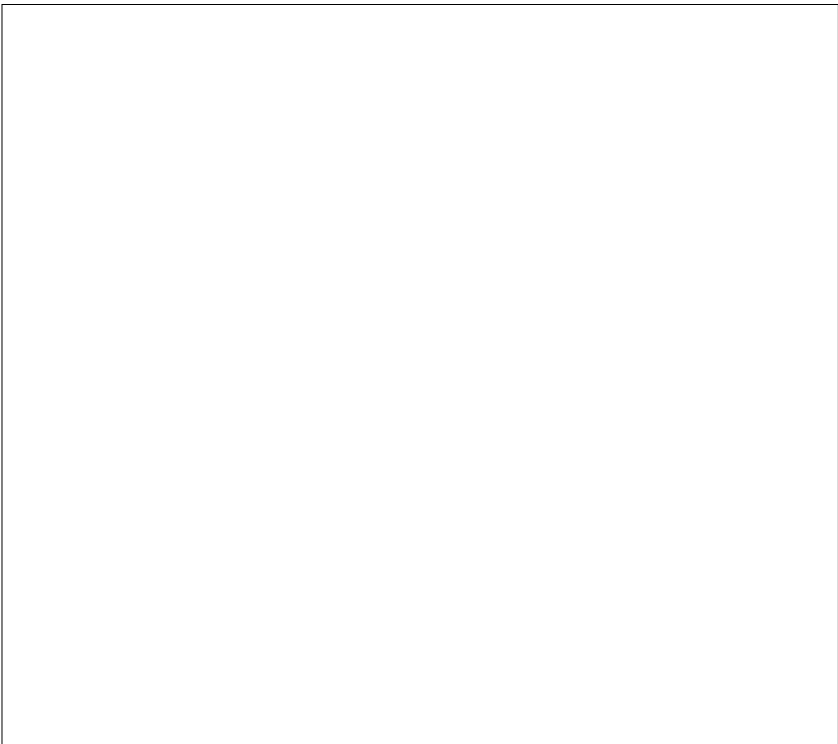
“바이든이 클린턴 때보다 득표를 늘린 곳에서도 증가분 평균은 [전국 증가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3.4퍼센트 밖에 안 된다. 또 그런 곳에서 바이든은 2016년에 트럼프가 가져간 표를 거의 되찾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바이든이 미국 대중의 반(反)트럼프 정서와 변화 염원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것은, 그가 지배계급 주류를 적극 대변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흑백 분리 지지자들과 함께 정치 이력을 시작했고, 수많은 흑인들을 감옥에 가둔 ‘폭력범죄 단속 및 법집행법’을 작성했다.

바이든은 호전적 제국주의자이기도 하다. 바이든은 1990년대에 체첸 침공 결정을 주도했고, 이후 미국의 이라크



“트럼프 이 멧청아, 넌 해고야!” 트럼프 패배를 환영하는 사람들

침공을 적극 지지했으며, 오바마의 부통령으로서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압력을 직접 행사했다. 당시 미국의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 전략은 오늘날 미·중 갈등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됐다.

바이든의 부통령 당선인 카말라 해리스도 정치 이력 내내 경찰력 강화와 범죄 엄단을 옹호했고, 사형 집행과 미국의 시리아 침공을 지지했다.

바이든은 자신이 트럼프처럼 몰인정한 인간이 아닌 것처럼 비쳐지길 바랐지만, 그가 기반한 미국 지배계급 주류의 이해관계를 적극 대변했다. 그래서 바이든은 최저시급 인상 요구에 반대했고, 국경 단속 강화와 미등록 이주민 강제 수용을 지지했으며, 경찰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벌여 논란이 되자 몸통 대신 ‘다리를 쏘라’고 했다.

이런 바이든이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서민을 대변할 후보로 여겨지기는 어렵다.

민주당이 트럼프에 맞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며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압도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상·하원 선거와 주정부·주의회 선거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의석을 상당히

잃고 상원에서도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 텍사스·노스캐롤라이나·아리오와·펜실베이니아·미시건에서 주정부 장악에 실패했고, 뉴햄프셔는 공화당에 뺏겼다. 이 주들에서는 낙태권, 경찰 재정 삭감 등 이제껏 운동이 성취하거나 요구한 권리들이 주정부의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성적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주류 언론들은 민주당이 너무 ‘좌파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보파 탓을 했다. 하지만 이는 번짓수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오히려 알렉산드리아 오키시오-코르테스로 대표되는 좌파적 여성 하원 의원들 “스쿼드[분대]”는 모두 재선에 성공했고, 민주적 사회주의 운동의 지지를 받는 의원의 수는 갑절로 늘었다.

종합하면, 트럼프는 신자유주의 주류에 대한 불신을 반동적으로 자극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피해를 본 대중의 불만을 얼마쯤 결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과 경제 위기가 꽤나 심각했고, 트럼프에 맞선 저항이 거대했기 때문에 이 결집으로 재선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던 듯하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 위기를 낳고 심지어 위기에서 득을 본 기득권층을 대변한다 여겨졌고, 그 때문에 증오를 한몸에 받던 트럼프를 압도하지 못했다.

선거가 끝나도 위기는 남는다

바이든은 승리를 선언하며 “분노를 가라앉히고 … 위기에서 회복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 사회에는 여러 위기가 중첩돼 있다.

먼저 경제 문제가 있다. 미국 경제는 1930년대 대불황 이래 최대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트럼프는 몇몇 지표를 들며 경제가 회복세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미국 경제의 생산성은 2007~2009년 대침체 이전 수준으로 결코 회복하지 못했으며, 외려 또 다른 대침체를 앞두고 있다는 예측이 파다하다.

코로나19 위기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촉매 구실을 했다. 미국의 코로나19 위기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데,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고 24만 명 넘게 사망했다. 목숨을 부지한 수천만 명이 일자리와 집을 잃었고,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서민·유색인종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졌다. 반면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

트럼프는 이 위기를 키웠다. 트럼프는 방역 조치를 모조리 무시하고 경제를 재가동하라고 압박하며, 이에 반대

하는 전염병 대응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다. 동시에 트럼프는 코로나19가 허구라는 음모론을 부추겼고, 방역 완화를 촉구하는 극우 무장 시위를 고무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거치며 미국 경제는 역대 손꼽히는 낙폭으로 추락했다. 트럼프가 극우를 고무하며 급격히 오른쪽으로 기운 이유도 이런 중첩된 위기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기고 부자들은 부유해지는 체제, 전염병 대유행에도 변변한 의료·복

지 혜택은커녕 그나마 있는 복지도 삭감하는 이 신자유주의적 체제를 만들고, 지키고, 굳힌 것은 미국 지배계급 기득권층이었다. 바로 바이든 자신과 그가 대변하는 자들 말이다.

대안 부재

바이든이 ‘회복’을 위해 내놓는 방안들을 봐도 그런 면모가 드러난다.

바이든은 10년에 걸쳐 약 10조 달러 규모의 정부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얼핏 보기에 대단히 큰 듯 보이지만, 이를 10년으로 나누고 순수 신규 지출

만 꼽으면 변화는 보기보다 크지 않다.

바이든은 이런 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트럼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수준인데, 미국 법인세는 트럼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인하된 바 있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정부 지출만으로 지금 미국(과 세계)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생산성·수익률 저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설령 바이든 정부가 실제로 대규모 지출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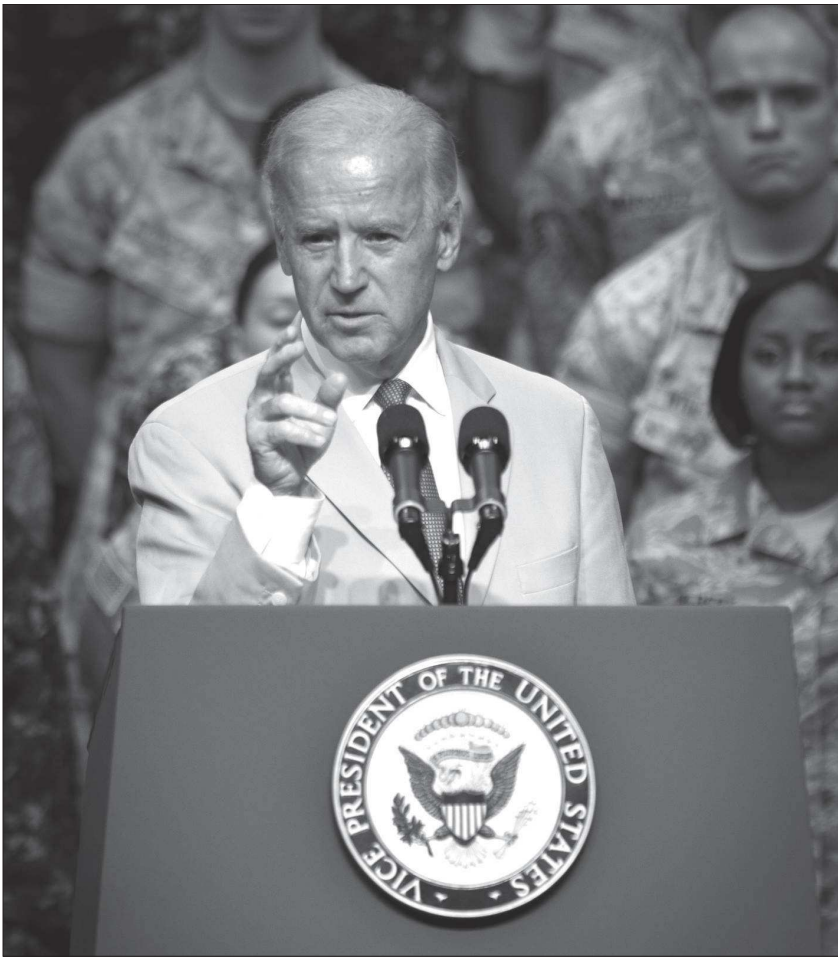


사진 출처: 미군

위기에 빠진 체제를 트럼프에 이어 대변할 조 바이든

바이든은 대중의 변화 염원에 부응하기는커녕 고통과 쓰라림을 키울 것이고, 그럴수록 위기는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첨예해질 것이다.

2019년에 이렇게 썼다. '70~90세가 되도록 열심히 산 사람들이 늙어서 하는 '일'은 대개 노는 것이다. ... 그런 삶이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라면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입은] 요양원들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신자유주의는 ‘큐어넌(QAnon)’ 음모론자들이 꾸며내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흉악한 일을 실제로 저지른다.”

인종차별 문제는 어떤가? 트럼프의 패악이 워낙 심각해 누구든 그에 견주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트럼프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바이든도 여기서는 만만찮다.

바이든과 해리스 모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거리를 뒀고, 운동의 요구를 한사코 거부해 왔다. 운동이 경찰의 재정 삭감과 해체를 요구할 때 바이든은 경찰 재정 3억 달러 증액 공약으로 응수했다.

상징적이게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던 오바마 정부 시절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장갑차와 중화기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진압했다.

바이든이 “회복”하려는 체제는 바로 이런 사회다. 미국 지배계급 주류가 바이든을 지지한 것도 이렇듯 바이든이 신자유주의의 철저한 대변자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크게 위기에 빠져 있고, 그에 따라 정치적 양극화도 첨예해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광범한 반감을 의식해 이런 저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그가 추진할 가장 담대한 정책도 기껏해야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고, 위기가 첨예해질수록 자신이 대변하는 지배계급 주류의 편에서 노동계급 대중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허니문’은 없다

바이든은 대중의 변화 염원에 부응하기는커녕 고통과 쓰라림을 키울 것이다. 그럴수록 위기는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첨예해질 것이다. 거기에 트럼프 4년이 남긴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체제 위기에 대응하며 미국 사회의 가장 반동적인 부위를 결집시켰다. 트럼프는 극우를 고무해 위기를 키운 잘못을 가리고,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트럼프의 전략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다.

트럼프 덕에 미국의 극우·파시스트들은 이전에는 없던 영향력과 전국적 전망을 갖게 됐다. 이들은 선거 기간에도 주(州) 경계를 넘나들며 반(反)트럼프 유권자들을 겁박했고, 개표 와중에는 경합주에 집결해 몇몇 개표소를 무장 습격했다.

트럼프가 계속 쟁투에 매달리는 것도 이와 연관 있다. 그로써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와는 별개로, (끝내 패하더라도) 극우가 힘을 얻어 기세를 유지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 등 자신이 스퍼커 구실을 한 온갖 강경우익 운동을 극우·파시스트들과 더 가깝게 연결시킬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극우·파시즘이 성장할 계급적·정치적 토양이 더 일궈질 것이다.

한편 공화당의 대응은 ‘엇박’으로 요약된다. 트럼프의 쟁투를 지원할지(그럼으로써 트럼프의 극우 키우기 어젠다를 도울지), 아니면 트럼프와 거리를 두고 기존 정치 질서 복원에 일조할지(그럼으로써 당을 “대자본의 믿을 만한 도구”로 다시금 자리매김하게 할지)를 두고 복잡한 계산에 빠져 당내에서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통적 대자본 정당 공화당 내에 계급 기반이 다른 우익 포퓰리즘 세력의 영향력이 트럼프 4년을 거처며 상당히 커진 것을 반영한다(관련 기사 본지 342호 ‘미국 대선과, 트럼프가 일으킨 정치적 지각 변동’).

투쟁

파시스트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 대표는 바이든 승리 선언 직후 이렇게 말했다. “‘몰려서서 일단 대기’하라면 지침은 해제됐다.” 행동에 나선다는 엄포다.

바이든 하에서, 코로나19가 극우의



사진 출처: Red Swan Collective

재결집 지점이 될 수 있다. 팬데믹 초기에 미국 극우가 방역 완화, 마스크 반대 등을 걸고 무장 시위를 벌였던 것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 이미 영국·독일 등 유럽 곳곳에서 반(反)마스크 시위가 극우 결집의 토양이 되고 있듯 말이다. 이런 운동에 깔린 (코로나19 허구론 등) 음모론은 유대인 혐오, 국수주의 등은 극우·파시즘 정치의 요소들과 쉽게 만날 수 있다.

또, 지금껏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극우의 중요한 어젠다였던 인종차별·이주민 문제도 재결집의 축이 될 수 있다. 그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 이민자 권리 옹호 운동 등을 두고 극우가 폭력 행위를 일삼으며 자신의 세를 과시해 온 바 있다. 바이든이 선거 때처럼 집권 후에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거리를 두는 것이 극우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바이든의 신자유주의가 키울 고통과 반감을 (이번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그랬듯) 극우가 대변하게 될 여지도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모두에서 신자유주의 정부에 대한 환멸에 힘입어 극우가 성장한 일이 미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4년이 남긴 두 번째 결과물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노동계급 대중의 저항 말이다.

트럼프 임기 4년은 끔찍한 일들로 가득했지만 그에 맞선 저항도 만만찮았다. 트럼프 정부의 인종차별,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무슬림 혐오 등에 맞서 대중 저항이 계속됐다. 교육·서비스·공공부문 등에서 노동계급 저항도 조금씩 자라났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중 운동이라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분출했다. 수천만 명이 이 운동에 참가했다. 코로나19 고통 전가에 맞서 싸우던 노동자들이 이 운동에 커다란 영감을 받아 속속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운동들에 참가한 미국 대중은, 앞으로도 인종차별·극우뿐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펼칠 노동계급 조건 공격에 맞서서도 작업장과 거리에서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그런 투쟁으로 노동자 서민의 이해관계를 진정으로 대변해야 극우의 부상도 저지하고, 위기를 낳고 키운 지배 체제에 옮겨 맞설 수도 있다.

그러려면 투쟁을 중심에 두고 건설하는 일관되고 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등 민주적 사회주의 운동은, 트럼프를 선거로 패배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바이든의 신자유주의를 비판을 일절 삼갔고, 이제 그 전략에 발목이 잡혀 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승리 선언을 하기가 무섭게 진보파를 단속하고 나섰다. 바이든은 “내가 했던 말 어디를 봐도 나를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라고 여길 부분은 한마디도 없다”고 했고, CIA 요원 출신인 민주당 하원의원 애비게일 스파번거는 “사회주의니 사회주의자니 하는 말을 집어치워야 한다. 그 때문에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훌륭한 지지자들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를 거처며 첨예해진 위기에 대응하며 대중의 변화 요구를 받아안기는커녕 이를 단속하기 위한 포석이다. 하지만 미국 민주사회당(DSA) 소속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여기에 “우리는 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고 적극 맞서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한편, 샌더스가 바이든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 되리라는 허마평이 무성하다(샌더스 자신도 의사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샌더스가 바이든 정부의 일원이 되면, 정부의 입장에 순응(타협)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을 상시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체제 위기가 심각한 시기에 그런 압박은 대중을 위한 변화 염원을 단속하는 방향으로 가해질 것이다. 샌더스가 그런 길로 가게 된다면,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보적 변화 염원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는 다른 전략, 대중 운동을 근본에 두는 전략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미국의 역사가이자 투사였던 고(故) 하워드 진의 말처럼, “역사가 진보하고 부정의한 질서가 무너진 것은 ... 정치인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직접 행동했을 때만 가능했다.”

트럼프에 이어 이제 바이든이 대변하게 될 체제의 패악에 맞서야 할 지금, 그런 노동계급 대중 운동이야말로 비할 바 없이 중요하다. 이를 일관되게 고무할 혁명적 정치가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강력해지기를 바랄 때다.

자본주의는 왜 플라스틱과 비닐을 좋아할까?

해양 생물들이 비닐봉지에 갇힌 모습 등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마땅하게도 해양 오염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화석연료를 가공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그 후 석유 화학 업계가 어떻게 플라스틱 소비를 부추겼는지 **에이미 리더**가 살펴본다.

플라스틱은 나쁘다. 그렇지 않은가? 이제 이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상식이 됐다. 우리의 목소리가 들끓는 것도 당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BBC 다큐멘터리 “블루 플래닛”[한국에서는 “아름다운 바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됐다]에서 향유 고래의 뱃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하고, 알바트로스가 새끼에게 플라스틱을 먹이고, 거북이가 비닐봉지에 갇힌 모습 등을 보면 충격을 받는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억만장자들을 위해 2016년에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1억 500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바닷속에 존재하며 매년 800만 톤씩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플라스틱 조각 5조 개가 바닷속에 있고 계속 증가 중이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플라스틱의 무게가 바닷속 모든 물고기의 무게를 합한 것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런데 모순이 있다. 플라스틱은 환경에 큰 해를 끼치지만 동시에 의학과 위생, 식품 보존, 수도 등의 분야에서 여러 발전을 가능하게 한 굉장한 소재다.

우리는 플라스틱이 이 세계와 동떨어진 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플라스틱 이야기는 정말이지 자본주의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핵심적으로 보여 준다.

플라스틱은 화석연료 산업의 부산물이다. 모든 플라스틱의 99퍼센트는 석유와 가스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로 생산된다. 플라스틱의 생산을 추동한 것은 이 체제의 중심에 있는 끊임없는 이윤 추구였다. 전쟁은 플라스틱 개발을 더욱 부채질했고, 국가 투자로 생산 확대를 보조했으며, 기득권자들은 우리가 플라스틱을 더 많이 소비하도록 부추겼다.

플라스틱 생산을 추동하는 것은 “소비자 수요”가 아니다. 즉, 소비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플라스틱 생산은 현대 산업 자본주의의 화석연료 기반 경제와 단단히 얽혀 있다. 화석 연료 기반 경제는 기후 위기의 근원이기도 하다.

플라스틱의 기원은 19세기 중반에 개발된 셀룰로이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셀룰로이드는 식물에 있는 천연 고분자 물질인 셀룰로오스를 기반으로 하며, 상아를 대체할 용도로 개발됐다. 최초의 진정한 합성 플라스틱은 베이클라이트로, 1907년 한 연구실에서 셀락의 대용품으로 발명됐다. 이후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다. 과학자들은 자연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새롭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려 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2050년에는 바닷속 플라스틱의 무게가 모든 바닷속 물고기를 능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 곳곳에서 과학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물질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석유의 여러 쓰임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안 앵거스가 《인류세를 마주하며》에서 개괄하듯이, 석유 기업들이 연료 시장을 한창 확장하는 동안 화학 산업은 석유 정제 과정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있었다.

부산물

《플라스틱, 유독한 사랑 이야기》[국역 《플라스틱 사회》]를 쓴 수전 프라인켈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석유 재벌] 존 D 록펠러에 관한 일화를 소개한다. 록펠러는 자신의 정유 공장을 바라보다가 몇몇 굴뚝에서 불길이가 타오르는 것을 봤다. 그는 무엇이 타고 있는지 물었고, 정제 공정의 부산물인 에틸렌 가스라는 답을 들었다. 그러자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것도 낭비돼선 안 돼. 저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내 봐.”

사실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는 현대 석유화학 산업의 기원을 요약적으로 보여 준다. 그것은 땅에서 뽑아올린 모든 화석연료를 이윤 추구에 이용해야 한다는 신조였다.

플라스틱 생산을 추동하는 것은 소비자 수요가 아니다. 즉, 소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체제의 중심에 있는 끊임없는 이윤 추구가 플라스틱 생산을 추동했다

연소되는 에틸렌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무연가’는 1933년에 발견된 폴리에틸렌이었다. 그것은 기존에 알려진 다른 중합체들과는 너무 달라서 아무도 그 용처를 상상해 내지 못했다. 그러나 폴리에틸렌은 가장 흔히 쓰이는 고분자 물질이 됐다. 폴리에틸렌은 저렴하고, 내구성이 높고, 유연했다.

오늘날 석유화학 부문에서 가장 큰 기업인 다우듀폰, 엑슨모빌, 쉘, 세브론, BP, 시노펙은 화석연료와 플라스틱을 모두 통합 생산하는 기업들이다. 이들의 뿌리는 대부분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석유화학 산업체들은 서로 제휴를 맺거나 수직계열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전후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널리 사용할 토대를 마련한 것은 제2차세계 대전이었다.

전쟁은 플라스틱의 다재다능함을 뽐낼 기회였다. 폴리에틸렌, 나일론, 아크릴, 폴리스티렌 등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주요 플라스틱들이 전쟁 중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전쟁 중에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하거나 증설하는 데 30억 달러 이상을 썼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 공장들을 헐값에 살 수 있었다.

전쟁 기간 동안 플라스틱 생산량이 4배로 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이러한 생산 능력에 걸맞는 판매처가 필요했고, 그래서 플라스틱이 소비자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플라스틱 기업들의 계획이었다. 듀폰에는 이미 1943년 초부터 당시 전쟁에 쓰이던 플라스틱으로 가정용품 시제품을 개발하는 부서를 따로 뒀다.

부력과 절연성이 있어서 미국 해안 경비대의 구명보트로 쓰이던 폴리스티

렌은 이제 휴대용 컵과 아이스박스에 쓰였다. 폴리에틸렌은 뛰어난 고주파 절연 능력을 잠시 제쳐두고 샌드위치나 드라이클리닝한 옷을 포장하는 새로운 경력을 시작했다.

초창기 플라스틱 업계의 한 임원은 회상하기를,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아직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었지만, 장차 무엇이든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군을 확장시켜서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했다.

장난감

그래서 플라스틱은 우리의 집, 자동차, 옷, 장난감, 일터, 심지어 우리의 몸 속으로까지 고요히 파고들었다.

오늘날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논하면서 대중적 소비주의와 일회용품 소비 문화 탓으로 돌리는 일이 매우 흔하다. 하지만 일회용품 소비 문화는 소비자가 이끌었기보다는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기업들에 의해 조장되고 추진됐다.

석유·가스 산업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이 놀라운 물질들은 우선 새로운 제품으로 변신해야 했다. 그 다음에는 이 새로운 용처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내야 했다. 여기서 플라스틱 산업은 큰 문제에 직면했다. 플라스틱은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플라스틱 제품은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또다시 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플라스틱 업계는 우리가 더 많은 플라스틱을 원하고 필요로 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그리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탄생하고 ‘쓰고 버리는’ 시대가 열렸다. 1956년에 열린 ‘플라스틱 산업 회의’에서 한 발표자는 청중석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자들에게 말했다. “쓰레기 수거차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다”.

처음에는 일회용품이 잘 팔리지 않았다. 당시 세대가 대공황과 전쟁을 거쳐 왔기 때문이다. 그런 시기에는 “어떻게든 고쳐 쓰자”는 표어 대로 사람들이 아무 것도 낭비하려 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새로 산 플라스틱 제품을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보관했다.

이런 태도를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언론 캠페인이 벌어졌다. 《라이프》지에 실린 일명 ‘쓰고 버리는 생활’을 찬양하는 기사가 전형적인 사례다. 이 기사에 실린 삽화에는 접시, 포크, 나이프, 봉지, 재떨이, 개갑그릇, 들통, 바비큐 그릴 등등 각종 일회용 제품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가 두 팔을 치켜든 채 기뻐하고 있다. 이 기사의 필자는 이 모든 물건들을 설거지하고 닦으려면 40시간이 걸릴 테지만 이제는 “어느 주부도 그런 성가신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마찬가지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명사인 비닐봉지는 1970년대 중반에 처음 소개됐을 때 인기가 없었다. 봉지를 벌리려면 계산원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야 했는데 이를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대형 마트들이 경제 논리에 넘어 갔다. 종이봉투는 비용이 3~4배 비쌌는데, 일단 한두 대형마트가 비닐봉지를 쓰기 시작하자 모두 비닐봉지로 바꿨다.

일회용

라이터, 펜, 면도기, 빨대 등등 여러 상품들이 한 번 쓰고 버리도록 다시 설계됐다. 오늘날 생산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 중 절반은 일회용이고, 그중 핵심은 포장재다. 포장재는 전체 플라스틱 생산의 26퍼센트를 차지한다.

자본주의는 사실상 영원히 썩지 않는 물질로 한 번만 쓰고는 버릴 물건들을 만든다. 자본주의의 비합리성을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내야 했다. 일회용품 사용을 찬양하는 1955년 <라이프>지의 글에 실린 삽화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최근 실린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초 이후로 생산된 플라스틱이 총 83억 톤에 달한다. 그리고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톤이 추가로 생산된다. 생산량은 계속 늘고 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5000억 장에서 1조 장 사이 어디쯤이다. 1분에 100만 장 이상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길 바라는 사람들이 비닐봉지를 주요 표적으로 삼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 주간지 <뉴 사이언티스트>는 면으로 된 에코백이 일회용 비닐봉지보다 친환경적이라면 에코백을 버리기 전에 131번 이상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코백의 환경 비용은 대부분 목화를 재배하면서 생긴다. 순전히 에너지 측면에서만 보면, 철제 물병은 만드는 데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500번 넘게 써야만 일회용 물병보다 환경에 이롭다.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더 많이 재활용하는 것

이다. 전 세계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거되는 플라스틱은 전체의 14퍼센트에 불과하다.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그 중에서도 3분의 1(전체 생산의 5퍼센트)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즉 오염물질이 되어 자연으로 흘러들어 간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

재활용 시설

양질의 재활용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플라스틱은 종류가 다양하며, 종류별로 분류해서 재활용해야 한다. 적외선 센서를 쓰면 이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우스 런던 사우스위크에 있는 최첨단 폐기물 및 재활용 센터에서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플라스틱에 빛을 쏘인다. 그리고 반사된 빛으로 종류를 판별하고 공기 분사기로 플라스틱들을 종류별로 각각 수집 지점으로 밀어 넣는다. 이 시설에는 가장 재활용하기 까다로운 비닐봉지와 검정색 플라스틱 식품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도 있다.

다른 지역 시설들은 훨씬 조악하다.

대부분의 분류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 거의 없다. 가장 정교한 가공 센터들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바로 혼합 플라스틱이다. 제조업체들은 혼합 플라스틱을 선호한다.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산업적 수요도 있어야 한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요구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으로 생산하기 매우 어렵다.

영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상당수는 재활용을 위해 해외로 보내진다. 그러나 폭로된 바에 따르면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그냥 소각되거나 터키, 말레이시아 등지의 매립지에 버려진다. 중국은 최근 ‘외국 쓰레기’를 더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이 때문에 거래업자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받아 줄 다른 나라들을 찾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조업체들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에서 이득을 챙기려 한다. 그들은 재활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판매가 더 잘 된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챘다. 그것을 재활용할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사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자본주의는 사실상
썩지 않는 물질로
한 번 쓰고 버릴 물건들을
만든다.
자본주의의 비합리성을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저렴하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재활용률을 높인다 해도(물론 이를 요구하고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재활용 플라스틱만큼 새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이 줄어야 한다. 그러나 화석 연료와 석유화학 부문의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은 여전히 플라스틱 생산을 늘리는 중이고 더 늘릴 계획이다.

프래킹과 미국의 이른바 ‘셰일 혁명’은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산업에 더 박차를 가하는 데에 일조했다. 프래킹으로 추출한 미국의 셰일가스는 에탄이 풍부하다. 에탄은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 중 하나인 에틸렌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프래킹으로 값싼 에탄이 시장에 넘쳐났고, 심지어 미국은 에탄 수출로 이윤을 낼 수 있게 됐다.

영국 화학 기업인 이네오스의 스코틀랜드 그레이니저머스 공장에 처음 셰일가스가 도착한 것은 2016년이였다. 당시 프래킹 반대 활동가들은 격분했다. 하지만 그 셰일가스가 플라스틱을 더 많이 만드는 데 쓰일 것이라는 사실은 간과됐다. <플라스틱 뉴스>는 2013년에 이렇게 보도했다. “셰일 기반 천연 가스는 북미 플라스틱 시장에 30년에 한 번 율까 맡까 한 기회다.”

자본주의가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폐기물로 갈수록 더 많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은 계속해서 ‘합리적’이며 수익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로 서로를 도덕주의적으로 꾸짖기 보다는 상위 생산단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분노의 방향을 플라스틱 생산업체와 석유화학 기업들로, 그리고 기업들에게 프래킹을 허용한 정부들로 돌려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가 광범하자 최근 몇 년 동안 효과가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일회용 포크, 나이프, 빨대, 접시 등 일

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협약’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영국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80퍼센트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100퍼센트 재활용하고, 재사용·분해 가능하게 만들며,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모두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구속력이 없어서 기업들의 자발성에 기대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이것은 시작이긴 하다.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더 나은 재활용 시설을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

하지만 이것들 모두 충분하지는 않다.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화석연료를 땅속에 내버려 뒀야 한다. 바다와 자연계가 플라스틱으로 꽉 차는 것을 막으려면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야 한다.

자본주의의 논리, 즉 이윤 추구는 그 반대를 요구한다. 플라스틱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패 현실적이다. 플라스틱은 1950년대 이후에나 널리 사용됐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화석연료 기반 시설에 쏟아 부은 투자금도, 높은 수익을 안겨 주는 상품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저항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강제해야 한다. 프래킹 반대 운동은 영국에서 화석연료 영역의 확산을 막거나 적어도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거대한 기업들에 맞서 싸울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2013년에 이네오스 트럭 운전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을 때, 스코틀랜드에 석유 공급은 절반으로 떨어질 위험에 놓였고 이윤이 큰 타격을 입었다.

프랑스에서 새 노동법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인 에너지 부문 노동자들은 연료 저장소를 봉쇄해서 휘발유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전기 생산량이 감소해서 전기를 수입해야 할 지경이 됐다.

이런 사례들은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톡톡 보여 준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노동자들은 생산을 중단하고 이윤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집단적 힘이 있다. 만약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난다면, 합성 플라스틱을 대체할 식물 기반 플라스틱을 개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강하고 내구성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화석연료가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고 더 많은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싸워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든 우선순위에 도전할 수 있는 더 광범한 요구와 운동을 그 싸움과 결합시켜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439호 번역 오선희

🔍 용어설명

프래킹
수입파쇄법. 고압의 액체를 이용해 광석을 파쇄해 천연가스, 석유 등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지하수 오염과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



11월 11일 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 앞에서 열린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총파업 출정식' 사진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철도 자회사 노동자

이재환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오늘(11월 1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 한 노동자는 “사측은 올해는 정부지침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올려 준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임금인상이 더 힘들어집니다. 올해는 임금을 올려서 최저임금을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철도공사는 공사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회사 노동자는 근속 수준이 같은 공사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80퍼센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 대부분이 여전히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세금을 제하고 받는 임금이 월 160만 원에 불과하다. 철도공사 정규직의 44퍼센트 수준이다.

인력도 매우 부족해 아파도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규정상 2인1조로 근무해야 할 역에 1인이 근무한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이라고 말하지만,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렇다. 사측은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공사로의 직접고용은 끝내 거부했고,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철도공사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사측 모두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 혈안이었다. 심지어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 결국 그 부족분을 철도공사가 추가로 보전해 주는 일도 있었다.

철도공사 사측이 턱없이 부족한 위탁비를 지급했고, 자회사 사측은 이를 이유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 지침을 근거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태도다. 올해부터 위탁 계약이 개선했다 자회사에 지급되는 위탁비가 조금 늘어 재원이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저임금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률은 고작해야 최대 4.3퍼센트다. 사측은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에 따라 인건비 증가분이 4.3퍼센트를 초과하므로 더 올려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을 지급하면서 이를 임금 인상으로 통 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정부 지침 수준의 인상으로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인상률을 코레일네트웍스에 적용해 봐야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임금 억제

정부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낮게 책

정해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이를 근거로 임금 인상을 회피해 결국 노동자들에게 “평생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호봉제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이미 직무급제가 시행돼 왔는데, 이것이 저임금을 고착시키는 효과를 내 왔기 때문이다.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나”하고 노동자들이 분개하는 데서 보듯 근속 기간이 길어져도 임금이 제자리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직무급제 임금체계 확산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가 임금 억제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또, 노동자들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 합의한 정년 61세로 연장도 사측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평생 최저임금을 받고 퇴직을 하면 고작 국민연금 33만 원을 받고 생활해야 하는 처지인지라 정년 연장을 바라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얼마나 기만

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말과는 달리,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전환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경우, 전환 대상자 중 65.5퍼센트가 자회사로 전환됐다. 그런데 자회사 전환 노동자 중 절반은 전환 이후 임금 등 처우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나빠졌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자, 정부는 공공기관들에게 지출을 최대한 줄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 요구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기업주들을 위한 지원에는 신속하고 통 큰 정부가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에게는 인색하게 구는 것을 보면서 노동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평생 저임금”이라는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선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정당하다.

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최근 문재인 정부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엄중 처벌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당 수령 처벌을 말하기 전에, 그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체불’한 것부터 지급해야 한다.

7급 20호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시간당 3만 5518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감액해 시간당 1만 509원을 지

급(2019년 기준)한다. 또, 18시~19시(1시간)은 근거도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공제한다. 게다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만 1일 4시간 한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임금을 때먹는 악덕 사용자인 정부가 ‘부당 수령’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무엇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올해 내내 코로나19와 태풍, 폭우, 폭염, 돼지열병 등에 대처하기 위해 휴일도 반

납하며 일해 왔다. 이 와중에 과로로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공무원까지 생겼다.

정부는 말로는 노고가 많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코로나 위기로 재정이 없다며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을 삭감했다. 심지어 각종 수당 반납, 성금 모금 등 고통 ‘분담’까지 강요했다.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도 10년 만에 가장 낮은 0.9퍼센트로 결정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

정부는 경제 위기와 코로나 국면 속에 고통받는 저소득층·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무원 노동

자들의 임금과 수당을 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위선적이게도 정작 정부는 최저임금을 고작 1.5퍼센트(130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아껴서 다른 노동자들에게 주기는커녕, 공무원 노동자들을 본보기 삼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당 수령’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임금과 수당 삭감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려는 것이다. 게다가 ‘혈세 낭비’ 운운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이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

럼 이간질도 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징계 규칙 개정을 규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 개정이 문제라는 주장(11월 4일 공무원노조·공노총 성명, ‘노정 신의·대등의 원칙 무시하고 일방적 징계규칙 개정 강행한 정부를 규탄한다’)은 이롭다. 얼마 전 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알량한 임금인상안 합의조차 내팽개친 것을 보면 정부와의 ‘협의’는 무망한 일이다.

지금은 정부의 징계 규칙 개정에 단호히 반대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모아야 할 때이다.

KBS 청소·시설관리 비정규직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맞서다

양효영

KBS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병가 도입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 노동자들은 KBS를 청소하고, 전기·통신 등 설비를 관리하는 노동자들로, 청사 관리 업무를 맡은 자회사 KBS비즈니스에 소속된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KBS비즈니스가 설립된 뒤 30년 동안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1년짜리 계약을 강요해 왔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여러 해를 근무하고도 매해 고용 불안을 겪어야만 했다.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도 참고 살아야 했다. 근속수당도 없었고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사측은 기존 식대 10만 원을 임금 인상분으로 산입해 사실상 식대를 삭감했다. 지난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한 뒤에야 식대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병가를 쓸 수 없는 것도 노동자들에게 큰 불만이다. 대부분 고령에 오랜 시간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지만 KBS비즈니스 사측은 병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아프거나 수술을 받으면 휴가나 연차를 끌어다 써야만 했다. 완쾌가 안 되면 사측 관리

자는 퇴사를 종용하곤 했다. 한 청소 노동자는 목발을 짚고 출근해야만 했다.

이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동자들은 KBS비즈니스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당하다. 노동자들은 KBS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말하듯이 “우리도 KBS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다. 청소 노동자가 없으면 KBS 뉴스도, 추석 콘서트도, 드라마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문제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이기도 하다. 모회사 KBS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됐지만, 그 자회사인 KBS비즈니스는 누락됐다. 정규직 전환 2단계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자회사’ 또는 ‘자치단체 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다. 사측도 이런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염원을 무시해 왔다.

노동자들이 1년짜리 계약을 규탄하며 삭발까지 감행하자, 사측은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KBS비즈니스회 황의천 지회장은 사측의 제안을 이렇게 비판했다. “1년 단위나 3년 단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2년 늦춰지는 것뿐이죠. 고용 불안이 해소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모회사 KBS 양승동 사장은



“우리 없이는 뉴스도, 추석 콘서트도, 드라마도 제대로 못 합니다.” 11월 11일 KBS 신관 앞 총력투쟁 결의대회

앞으로 3년 동안 직원 1000명을 감축하는 경영혁신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노동자들이 앞으로 3년 뒤 “비정규직의 목에 칼날로 돌아올 것”이라며 우려하는 이유다.

또한 노동자들이 투쟁하자 사측은 병가 4주를 제공하겠다고 물려섰지만,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차별 없이

8주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KBS비즈니스는 정년을 정규직과 똑같이 맞춰주게 되면 정규직하고 복지도 똑같이 해주야 하는 것 아니냐. 자회사이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한다.

모회사인 KBS는 아직까지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자회사와 모회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노동자 처우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8퍼센트가 찬성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

정부의 특고 노동자 대책

소득 반토막, 보험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들

이창배 특수고용 노동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국장

코로나19 위기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타격했고 그중에서도 노동조합 밖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컸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175만 원 남짓 벌던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수입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락했다. 지난 3, 4월에는 반토막이 났다가 2.5단계로 격상된 9월에는 거의 70퍼센트까지 소득이 감소하기도 했다.

게다가 대리운전업체들은 특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방역 용품 등을 일체 지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업체들은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출근비 등 기존에 온갖 명목으로 걷어가던 돈은 그대로 가져갔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사고를 대비해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업체들은 이 보험료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게다가 여러 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노동자들은 업체 수만큼 보험료를 내야 해서 부담이 상당하다. 3업체 일감을 받는 노동자는 보험료를 3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불만은 높아져 왔다. 특히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악덕 업체로 인해 불만이 높다. 수수료를 30퍼센트나 떼가기 때문이다. 대리비 1만 원을 받으면 수수료 3000원 떼고, 출근비라고 또 3000원 떼서 노동자들 손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노동법과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자 문재인 정부가 특고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우후죽순 내고 있다. 특고 노동자 긴급고용안정금 지원,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입법 추진,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입법 추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추진” 등등.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정부가 내놓는 대책에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조치는 누더기였다. 불충분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문재인 정부가 온갖 생색을 내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을 만회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겨우 월 50만 원씩 4개월만 지급했다. 게다가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에 2만3천 명만(1차)이 이 지원금을 받은 상황이다.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 첫 단추로 특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생색을 냈지만, 실제로는 전면 적용이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정하겠다고 한다. 또다시 많은 특고 노동자들은 배제될 것이다.

게다가 많은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데에도 여전히 커다란 장벽이 있다. 특히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주로 일하는지를 따지는 ‘전속성’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전속성 기준을 “폐기하는 게 맞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전면적 폐기가 아니라 “직종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매년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가르고 많은 이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해 왔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생색만 엄청 내고 실제로는 불충분하고 허술한 대

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사회보험 혜택도, 노동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저런 핏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

예컨대, 정부가 사측의 “갑질을 차단”해 주겠다고 발표한 특고 지침은 사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외 업무를 강요하는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지침 위반으로 사측을 제재하기가 어렵다. 담당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입증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노동자가 다른 회사와 계약할 여지가 있었다면 경쟁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로 제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특고 지침과 유사한 내용의 ‘표준계약서’가 얼마 전 대리운전 분야에도 도입됐다. 대리운전의 경우 대부분 계약서가 없거나 사업주가 입맛대로 만든 위탁계약서가 일반적인데 사업주들은 업계 관행이라며 온갖 비용을 전가

하고, 통보조차 없이 마음대로 배차제한(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왔다. 이런 상황에서 표준계약서 도입은 “유령 취급”을 받아 온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부당한 계약에 항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다. 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전속성 없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관련 내용을 제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전속성 유무로 두 개 만드는 촌극도 벌여야 했다.

무엇보다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이 없어 노동법 위반처럼 처벌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특고지침을 개정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고 업체의 갑질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현실에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50년 전 외침은 지금도 유효하다.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모든 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박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본격 다루기 시작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늘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다.

이번 국회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정부 입법안도 상정됐다. 상당수 노동자들을 또다시 보험 혜택에서 누락시킨 누더기 법안이다.

정부는 2년여간 공들여 온 노동개악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표명했다.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장 한정애는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11월 국회 통과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과도 의견 일치를 봤다는 얘기이다.

둘 사이에 쟁점이 있다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까지 추가로 개악할 것이냐 하는 점뿐이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기업주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데서는 한통속이다.

주 52시간제 무력화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나선 직접적 이유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마비돼 있는 동안에도 '계도기간'을 뒤서 주 52시간제 시행을 거듭 연기시켰다. 또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늘리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 사용자들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말이면 그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50인 이상)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다급해진 기업주들의 "보완책 마련" 요구가 더 강해졌고, 정부도 개악안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법에 정해진 단위 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시간만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그 내에서는 사용자들 마음대로 노동시간의 길이,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니 사용자들은 일감이 몰리는 기간에 노동자들을 장시간 부려 먹을 수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과 달리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덜 수 있다.

단위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면, 사용자들은 더 용이하게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가령, 계절에 영향을 받는 빙과류·냉난방장



김민우 기자

장시간 노동에 골병 드는 노동자 처지 외면 말라 2019년 10월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 등의 업종이나 일정 주기로 일이 몰리는 여행상품 판매업 등에서는 성수기 3개월 동안 최대 주당 64시간까지 바깥 장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속해서 활용하면 장시간 노동이 허용되는 기간이 두 배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6개월 이상 최대 주당 64시간 노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한 사업장의 노동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사업 부문·부서·직종별로, 심지어 대상 노동자를 특정해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단지 계절적 업종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노동자들을 유연하게 돌려 쓰면서 장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거나, 재고 물량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다가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된 버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각종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대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이 대폭 확대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케아 노동자들, "유연근무는 '워라벨' 파괴"

사실 유연근무제는 박근혜 정부도 추진해 온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도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부터 확대하려고

애써 왔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에 착수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일찌감치 제시한 바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공공기관에서 활용도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가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일·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라고 홍보했지만, 그것은 허울좋은 말일 뿐 진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진정한 목적은 제한된 인력·비용으로 기업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다.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추가 연장근로, 휴일특근까지 더하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는 경기

가 잘 나갈 때 확실히 기업주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줬다. 그런데 이제 경제 위기가 깊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사용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탄력적으로 노동시간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결합시키고자 한다.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뜻하는 바는 노동조건 악화, 임금 삭감, 압축된 장시간 노동과 생활 리듬의 파괴 등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건설연맹 산하 건설기업노조는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11주 연속 주당 64시간씩 일하면서 골병 드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했다. 지난해부

터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해당 건설업체들은 거의 100퍼센트 탄력근로제를 전면 도입했다.

- 주당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온 버스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노동시간 단축을 열망해 왔다. 이제 버스업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됐는데, 노동자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동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임금이 삭감된 데다 탄력근로제 도입 이후 연장근무를 할 때도 수당을 못 받기 때문이다. 월 평균 임금이 3분의 1가량이나 줄어든 수 있다고 한다.

- 이케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규칙한 근무스케줄 등에 맞서 최근 생애 첫 항의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기업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의 하나로 선정한 곳인데, 노동자들은 극도의 불안정한 저질 일자리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노동자들은 주당 16~40시간까지 노동시간의 총량을 선택할 수 있지만, 1일 노동시간의 길이와 출근시간은 정할 수 없다. 매일같이 변하는 근무스케줄 때문에 노동자들은 워라벨은 커녕 "인간관계[를] 끊어야 할 판"이라고 말한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선택권"과 "일·생활의 균형"을 보장할 리 만무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은 노동자들을 더한층 고통으로 내몰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운동이 대체로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를 규탄하면서도 노동자들 전반의 조건을 하락시킬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전태일 3법 모르쇠 하며 노동자 저항권 개악

이번 국회에서 다루지는 법안들 중에는 노동계가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를 얻어 발의한 전태일 3법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하는 개정안,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이 그것이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580만 명가량이나 있다. 이들에게 즉각 법을

적용하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요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전태일 3법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에도 상정됐지만, 다루지지도 않고 폐기됐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오히려 노동조합법을 개악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재인이 이를 정당화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세운 것은 개악을 위한 눈속임일 뿐이다.

실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의 내용

은 알맹이가 없다. 개정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신고제 개선 등이 아예 빠졌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했다지만, 노조 활동에 큰 제약을 뒀다.

반면, 사용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노동자들이 쟁의할 때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한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랬더니 되레 저항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노동 존중'은커녕 '사용자 존중'이다.